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신선배추 상시비축제 및 양파 TRQ물량 조기 도입
농식품부-농협중앙회간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

거시경제 동향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기획 정보

농림수산물 분야 R&D 투자 현황 및 효과 분석

농정 여론 동향

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농민단체가 바라는 대선공약(요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신선배추 상시비축제 및 양파 TRQ물량 조기 도입

※ 본 자료는 5월 31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신선배추 상시비축제 도입 및 양파 TRQ물량 조기도입」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도입 배경

- 그동안 농산물 비축사업은 의무수입물량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내산 가격안정 효과 미흡
 - 배추의 경우 수급여건 판단 후 사후적으로 수매를 실시함에 따라 물량 확보가 어렵고, 산지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 발생
 - 금년 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겨울배추 6천 톤을 수매·공급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김치업체 등으로부터 정부가 산지가격을 올린다는 비판 제기
- 현행 농산물 비축제도를 개선하여, 소비량의 일정 수준을 미리 확보한 후 수급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상시비축제」를 도입·추진
 - 대상 품목은 국내산 배추·고추·마늘로서, 배추 상시비축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
 - 고추·마늘은 의무수입물량을 중심으로 비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국내산에 대하여 실시

□ 주요 내용

- 기본 방향
 - (배추) 연간 20천 톤 수준(소비량의 0.5%)을 작기 별로 수매하여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작형전환기 등에 공급
 - (고추·마늘) 각각 6천 톤, 4천 톤(소비량의 2%)을 국내산으로 비축하여 김장철, 명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공급
- 금년에는 봄배추와 고랭지배추 11천 톤 수준을 수매·비축

- 먼저 가격이 하락세인 **봄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6월 중에 산지에서 6.5천 톤 실시**
-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고랭지배추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8월~9월 중에 고랭지배추 4.5천 톤도 수매·비축**
- **양파 수급안정**을 위해 **의무수입물량(21천 톤)을 신선양파로 조기에 도입**하여 시장에 공급
 - 통상 의무수입물량은 연말에 도입해 왔으나, 올해는 수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시기를 앞당기고 필요 시 의무수입 물량을 증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

<참고: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예상량>

- 금년도 양파는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노균병 등 병해충 발생, 우박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구분	평년 (A)	'11 (B)	'12전망 (C)	증감율(%)	
				평년비(C/A)	전년비(C/B)
재배면적(천ha)	19.5	23.0	21.0	7.7	△8.8
생산량(천 톤)	1,332	1,520	1,200	△9.9	△21.1

주: 조생양파 2,267ha(11%), 중만생 양파 18,690ha(89%)

주요 농정 이슈_2

농식품부 농협중앙회간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

※ 본 자료는 5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 이행약정서 체결」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금번 이행약정서는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업실시규정'에 따라 체결
- (농협) **통상의 절차대로 사업시행지침을 제정하여 감독**하게 되면 보조금이 투입된 농협의 개별 사업에 대해 세세하게 관리하게 되어 **자율성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이행약정서 방식 채택**
- (정부) 사업구조개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조건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한편, 농협은 정부지원 기간 및 규모를 약속받는 방식이라고 설명

□ 주요 내용

- 농협중앙회는 **다섯 가지 약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사업구조개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
 - ① **경제, 교육지원 등 각 부문별 독립사업부제 강화**
 - ② **경영 효율화**
 - ③ **자체자본 확충**
 - ④ **조합지원사업 개선**
 - ⑤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 책임판매**
-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4조 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5년간 지원(약 8천억 원)하되 농협이 스스로 마련한 사업구조개편 세부 추진계획의 이행실적 점검

- 지난 4월 초부터 이행약정서안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자율성 침해우려를 제기한 인사, 조직관련 조항 등에 대해서는 농협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하여 수정·보완
- 농협법(제9조 및 부칙 제3조)에 정부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농협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협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

금번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로 농업 노사 간 갈등 심화

- 농협 노동조합이 정부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 체결에 반발해 총파업 결의**. 준법투쟁(정시퇴근)을 비롯해 **8월경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
 -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들어가 전체 조합원 1만 5천 615명 가운데 1만 3천 988명(96.1%)의 찬성으로 파업 안건 가결
- (농식품부 측)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성 침해우려가 제기된 인사, 조직관련 조항 등은 대부분 수정 보완...향후 농협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협 스스로가 판단해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
- (사측) “사업구조개편의 원활한 이행과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약정서를 맺었다”며 “처음 농림부에서 제시했던 약정서에는 **경영 침해 요소**들이 많았는데 최종 체결한 약정서에는 이런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사업구조개편 이행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됐다”고 주장...**노조 측**과의 협상 여지에 대해 “약정서 수정안을 전달했는데 노조 측에서는 **약정서 체결 자체를 반대**하면서 추후에라도 정부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는 가정 하에 반대...”**현재로선 노사 간의 시각차가 커** 대화 어려울 것 같다”고 난색 표명
- (노조 측) 농협은 정부로부터 받는 것 하나 없이 끌려만 가고 있다"면서 "농협이 부족자본금 11조 원 중 6조 원을 자구 노력으로 조달했다는 것은 이미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면서 농협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
 -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처럼** 농협에서도 **인력 조정**과 **인건비 적정화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

출처: 연합뉴스(0212.5.31),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2012.6.01)

거시경제 동향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

※ 본 자료는 5월 31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경제구조

- 2010년 중 **우리나라 재화 및 서비스의 총공급액**(=국내산출액+수입)은 3,73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
 - 총공급액은 중간수요로 52.8%, 국내최종수요로 30.6%, 수출로 16.6%를 각각 사용
- 한편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을 보면 **2010년 32.9%로 전년(31.8%)보다 1.1%p 상승**
 - ※ 수출입비중(%) = [(수출액+수입액)/총공급] × 100

< 총공급 및 총수요 추이 >

단위: 조 원, %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C)	구성비	B/A	C/B
총 공 급 액	2,401.5	100.0	3,320.3	100.0	3,286.7	100.0	3,733.1	100.0	-1.0	13.6
국 내 산 출 액	2,068.8	86.1	2,740.1	82.5	2,775.0	84.4	3,124.0	83.7	1.3	12.6
수 입	332.6	13.9	580.2	17.5	511.7	15.6	609.1	16.3	-11.8	19.0
총 수 요 액	2,401.5	100.0	3,320.3	100.0	3,286.7	100.0	3,733.1	100.0	-1.0	13.6
국 내 수 요	2,058.1	85.7	2,769.8	83.4	2,752.7	83.8	3,114.5	83.4	-0.6	13.1
(중 간 수 요)	1,216.8	50.7	1,731.3	52.1	1,727.1	52.5	1,971.4	52.8	-0.2	14.2
(최 종 수 요)	841.3	35.0	1,038.5	31.3	1,025.6	31.2	1,143.1	30.6	-1.2	11.5
수 출	343.3	14.3	550.5	16.6	534.1	16.3	618.6	16.6	-3.0	15.8

취업구조

- 2010년 중 **우리나라 취업자수**(man-year 기준)는 20,355천 명으로 **2009년 (19,731천 명)에 비해 624천 명(3.2%) 증가**
 - **농림어업**은 2010년 1,585천명으로 **2009년(1,666천 명) 대비 4.9% 감소**

□ 산업연관효과

1. 생산유발계수

- 전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2009년 1.955에서 **2010년 1.948로 하락**
 - 이는 제조업의 기초소재업종(50.4% → 49.4%)과 소비재업종(57.2% → 56.7%) 및 농림어업(44.5% → 44.1%) 등의 국산 중간투입률 하락에 기인

2. 수입 및 부가가치유발계수

- 2010년 전산업 평균 수입유발계수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0.313 → 0.314)한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폭 하락**(0.687 → 0.686)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 중간투입률 상승(15.4% → 15.9%) 기인
- 2010년 농림어업 평균 수입유발계수는 전년대비 **감소**(0.183 → 0.179)한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증가**(0.817 → 0.821)

3. 취업유발계수

-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2009년 13.8명에서 **2010년 12.9명으로 0.9명 감소**
 - 국내 총산출액 증가율(12.6%)이 고용 증가율(3.2%)을 상회함에 따라 전산업의 취업계수(=취업자수/국내산출액)가 7.1명(산출액 10억 원당)에서 6.5명으로 낮아졌기 때문
- 농림어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2009년 40.5명에서 **2010년 37.3명으로 3.2명 감소**
 - 농림어업은 총산출액이 3.6% 증가하였으나, 고용 증가율은 마이너스(-4.9%)를 기록함에 따라 농림어업의 취업계수(=취업자수/국내산출액)는 2009년 32.6명(산출액 10억 원당)에서 2010년 29.6명으로 감소

기획 정보

농림수산물 분야 R&D 투자 현황 및 효과 분석

□ 농림수산물 분야 R&D 투자 연향

- 농림수산물 분야 R&D 투자액은 2011년 8,625억 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9.7%의 증가 추세**
 - 농림수산물 분야 R&D 투자 추이: ('08년) 6,539억 원 → ('09년) 7,197 → ('10년) 7,752 → ('11년) 8,625
 - 농림수산물 분야 R&D 투자액은 국가 전체 R&D 투자액의 **5.8% 수준**
 - ※ 국가 전체 R&D 투자액 추이: ('08년) 110,784억 원 → ('09년) 123,437 → ('10년) 137,014 → ('11년) 148,092, 연평균 10.2% 증가

< 국가 전체 및 농림수산물 분야 R&D 투자 현황 >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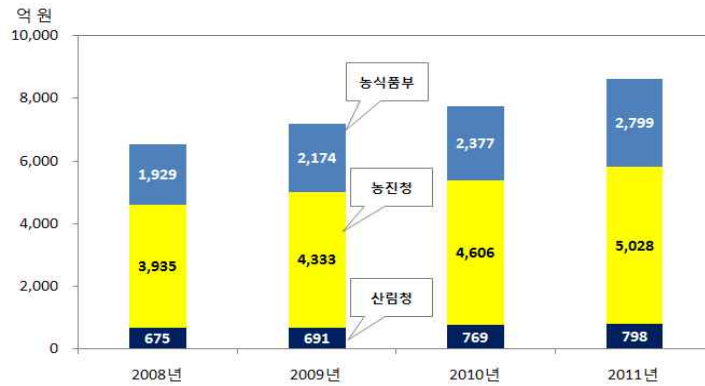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가 전체(a)	110,784	123,437	137,014	148,092
농림수산물 분야(b)	6,539	7,197	7,752	8,625
b/a	5.9	5.8	5.7	5.8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각년도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 2011.

○ 농림수산물 분야 부·청별 R&D 투자 현황

- **농식품부: 연평균 13.2% 증가**
 - ('08년) 1,929억 원 → ('09년) 2,174 → ('10년) 2,377 → ('11년) 2,799
 - ※ 비중 추이: ('08년) 29.5% → ('09년) 30.2 → ('10년) 30.7 → ('11년) **32.5**
- **농진청: 연평균 8.5% 증가**
 - ('08년) 3,935억 원 → ('09년) 4,333 → ('10년) 4,606 → ('11년) 5,028
 - ※ 비중 추이: ('08년) 60.2% → ('09년) 60.2 → ('10년) 59.4 → ('11년) **58.3**
- **산림청: 연평균 5.7% 증가**
 - ('08년) 675억 원 → ('09년) 691 → ('10년) 769 → ('11년) 798
 - ※ 비중 추이: ('08년) 10.3% → ('09년) 9.6 → ('10년) 9.9 → ('11년) **9.3**

< 농림수산물 분야 3개 부·청 R&D 예산 추이 >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각년도.

□ 2012년 농림수산물 분야 R&D 투자 방향

○ 2012년 농림수산물 분야 R&D 투자액은 9,089억 원으로 2011년 (8,625억 원) 대비 5.4% 증가(464억 원 증액)

○ 부·청별 농림수산물 분야 R&D 예산(안) 규모

- **농림수산물부**: 2,912억 원, '11년 예산(2,799억 원) 대비 4.0% 증액
- **농촌진흥청**: 5,333억 원, '11년 예산(5,028억 원) 대비 6.1% 증액
- **산림청**: 844억 원, '11년 예산(798억 원) 대비 5.8% 증액

○ 부·청별 R&D 투자 중점 분야

- (**농식품부**)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으로 영세한 영농규모, 농산물 수요 정체 등 **우리 농어업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돌파구 마련**
- (**중자**) '12년에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추진**,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 조성 및 민간중자기업 육성 등 중자산업을 육성
- (**생산**) 잉여에너지 저장기술 등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대형온실 등 환경제어 기술 등을 포함하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기술개발 강화**
- (**식품/유통**) 발효 및 저탄소 가공 등 식품 핵심기술 및 나노기술 이용 코팅제 개발 등 **농식품 품질유지 유통기술 연구개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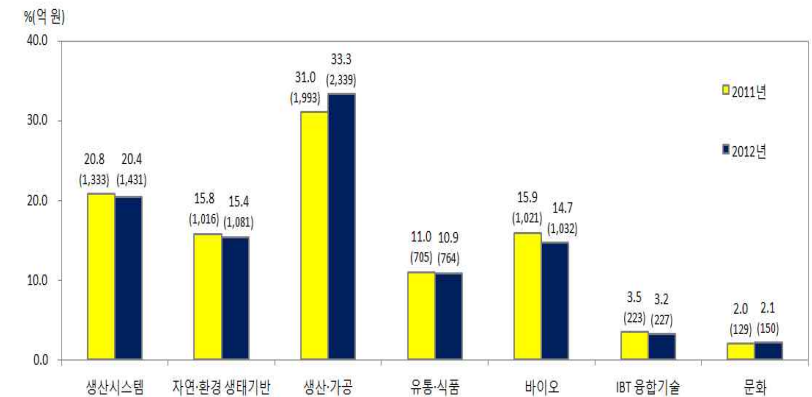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 농업 **현안문제 해결** 및 **현장 실용화 기술 분야 중점 투자**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첨단농업기술 개발 강화**
- 전통식품 산업화 및 지역농업 특성화와 **현장기술지원 강화**
- (**산림청**) 산림분야 민간부문의 동반성장을 통한 **녹색임업기술 R&D 투자**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정책 지원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산림생물종 다양성 확보 및 안정적인 보존기반 구축

○ 7대 산업(20개 분야) 투자 계획

- '12년 7대 산업별 투자 총액은 총 7,023억 원으로 농림수산물분야 정부 R&D 투자예산의 77%에 해당하며, '11년(74%, 6,421억 원) 대비 9.4%(602억) 증가

※ 농어업 시설현대화,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기술혁신 등 2012년 농식품 분야 주요 과제에 중점 투자

< 2012년 농림수산물 분야 7대 산업별 R&D 투자 비중 >



- '11년도 조정된 투자 포트폴리오('10년도 투자가 미진했던 분야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분야의 투자비중 확대)와 비슷한 투자양상으로 유지
- **“생산/가공 분야”의 투자비중 증가**(31% → 33%)에 따른 타 분야의 투자 비중 소폭 감소(생산시스템: 21% → 20%, 바이오: 16% → 15%)

□ 농림수산물 R&D 투자가 농림수산물분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R&D 투자가 10% 증가하면,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0.89% 증가, 식품제조업은 1.4% 증가(연구개발비 탄성치 기준) 될 것으로 추정되어 농림어업분야 보다 식품제조업 부문 R&D 투자 효과가 큼.

※ 총요소생산성(TFP)의 경우 농림수산물분야 R&D가 10% 증가하면 농림어업 총요소생산성은 1.9% 증가, 식품제조업 TFP는 3.8% 증가

- (2012년 부가가치 전망)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2011년 29조 1,960억 원에서 2012년에는 31조 2,010억 원으로 약 6.9% 증가 전망. 한편, 식품제조업은 27조 8,39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7.1%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12년 농림수산물 분야 부가가치 전망 >

단위: 탄성치, 10억 원

구 분	R&D연구개발비 탄성치(e) ¹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추정) ²
농 립 어 업	0.089	26,615	27,832	29,196	31,201
식품제조업	0.142	23,641	24,835	25,982	27,839

주 1) 동향분석실 R&D 모형 추정치(2000-2011).

2) 추정치는 기타 독립변수(고정자본스톡, 노동투입량) 변화 추세치 및 투자효과 동시 고려

<참고문헌>

- 농림수산물부, 제1차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0-2014) 2010년 시행계획, 2010
- 농림수산물부, 제1차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0-2014) 2011년 시행계획, 2011
-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2011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안), 2011
- 농림수산물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 동향 자료
- 통계청(식품제조업 부가가치 통계치), 한국은행(농림어업 부가가치 통계치)

농정 여론 동향_1

KREI 리포터 현장의 소리

□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여론 우세, 특성화학교 육성 등 대안 제시도...

- 교과부, 5.17일 학교 적정규모 기준 신설(초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가속화 전망...논란 확산
 - 강원, 전남북 등 농산어촌 도의 경우 절반 내외가 통폐합 대상이라고 언론 보도
- 쟁점: (찬) 규모의 교육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비효율적, 통합으로 교육의 질 높여야 (반) 농촌 여건 무시한 발상, 전인·맞춤형 교육의 장으로 돌파구 찾아야
- 현장 리포터 여론
 - 학교 통폐합은 농촌지역 교육과 학습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
 - 농촌지역 학교 통폐합은 귀농·귀촌을 유도하고자하는 정책에도 역행
 -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복식수업 등의 교육환경 개선 위해 일부 통폐합 필요
 -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면 폐교를 주민위한 공간으로 활용 방안 찾아야
 - 시골학교의 장점 살려 통폐합보다 특성화학교로 육성하는 정책 전환 절실

○ 농촌지역 학교 통폐합은 귀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 미쳐

-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학교폭력이 적고 대체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농촌에 학교가 없으면 귀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김종근, 전남 순천>
- 농촌지역 학교 통폐합은 현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를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됨. 농촌에 사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주고 그들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농촌학교 살리기에 정책지원과 관심제고 필요<주양호, 전남 장흥>
-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의 급감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고등학교도 겨우 유지 내지는 폐교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등하교

조건이 나빠져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고,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기가 힘들어 도시지역 학생보다 기초적으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종합적인 농촌지역 교육문제 해결책이 필요<김인남, 경북 상주>

-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로 정부에서는 경제 논리만 생각하고 학교를 통폐합해 나가고 있음. 학생이 완전히 없어질 때 까지는 학교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최근 들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자녀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이현순, 경남 통영>
-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폐교되었고, 중학교는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으로 다녔는데 시내버스 이용이 여의치 않아 바쁠 때는 일 하다가 아이를 보내고 와야 했음. 두 아이를 6년간 아침이면 태워다주고 있음. 농촌지역 아이들이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송인숙, 강원 강릉>

○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교육환경 개선 위해 통폐합 필요

- 초등학교 통폐합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복식수업 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해결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남도성, 충남 당진>
- 농촌지역 초등학교 통폐합에 대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됨. 우리 면은 전체 초등학교 27명, 중학교 25명, 초등학교 교장, 교감, 스쿨버스 2대, 중학교는 교장, 교감이 있는 상태임. 이에 효율적인 인력활용으로 예산을 절약해 버스를 구입했으면 함. 군에는 중학교 3개 정도로 운영하고 초등학교도 통합했으면 좋겠음.<나중주, 전남 화순>

○ 통폐합 불가피하다면 주민 위한 공간으로 활용 방안 마련을

- 지역주민으로서 학교는 운동회, 동창 체육대회, 마을 체육대회 등 화합과 문화의 장소이기도 함. 통폐합 후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적 이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남도성, 충남 당진>
- 학교 통폐합을 하면 학생이 없는 학교를 마을·지자체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했으면 함.<최시훈, 부산 기장>

- 농어촌 학생의 감소현상으로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면 합쳐지는 학교에는 통학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됨. 또한 폐교가 되는 학교는 농어촌 박람회장이나 농어촌 민박 및 관광농업으로 개조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 듯함.<김용덕, 경기 남양주>

- 학교는 교육청 재산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기부 채납 등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을주민의 매각 동의서 없이 폐교를 매각할 수도 없음. 폐교를 농어업에 필요한 공동 작업장이나 공동선별장, 공동저장소 같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박향숙, 전남 완도>

○ 시골학교가 가진 장점 살려 특성화학교로 육성 필요

- 강진에 강진북초등학교는 폐교위기에 야구부 창단의 노력으로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각기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연과 접하면서 많은 사고력·관찰력·상상력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는 것은 시골학교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됨. 따라서 통폐합 대상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육성하는 사례를 만드는 등 정책 전환이 필요<김은규, 전남 강진>

□ 기타 연성어론

○ 지자체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운영 필요

- 농촌지역에서 농업인이 조그마한 농산물 가공설비라도 갖추기란 힘든 일임. 이에 각 지자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건립해 운영하고 농가에서는 원료를 제공하여 쉽게 신선가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농가도 도움이 되고 지자체의 수익도 창출될 것임.<임충빈, 경기 안성>

○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 수립, 쾌적한 농촌경관 유지

-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핵심자원으로서 농촌경관의 중요성과 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촌경관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만들기 위한 각종 정책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김민호, 경기 이천>

※ 본 자료는 5월 28일~31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국내산 농산물 수매·비축 늘린다

- 농식품부, 5.24일 올해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한 **국내산 수매·비축사업** 대상으로 **콩, 마늘, 건고추** 대상 지정. 수입에 치중한 물가관리정책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미미, 국내 농업생산기반 약화시켜 장기적 수급 불안 심화 요인으로 작용해 외국산 농산물에 의존하던 수입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산 수매·비축을 확대**. 물량은 ▲콩 1만t ▲건고추 4,000t ▲마늘 6,000t 등 예정. **수매 예산은 작년(310억 원)보다 3배 (1,013억 원) 증가**. 수매가격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적정 수준을** 책정할 계획. **국내산 비축사업**은 수확기 **시장가격을 안정**시켜 **농가들의 생산의욕 향상, 국내 생산기반 확대에 기여**, 수급불균형 시기에 **국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해 생산자·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

자료: 농민신문(2012.5.30).

□ 수입과일 '응수' 국산과일 입지 '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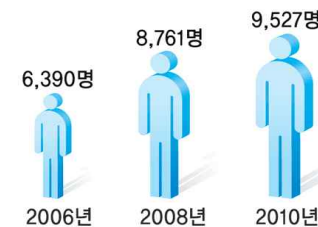
- 수입과일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생소한 과일도 대거 수입되어 대형 마트는 물론 골목상권의 노점에서까지 잠식해 국산 과일과 경쟁. 6월 중순 미국산 체리 수입량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나 **국산 과일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 이처럼 수입과일의 공세가 점점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자 전문가들은 **여름 과일은 물론 가을 과일까지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국산 과일의 품질 고급화, 생산비 절감, 안전성 확보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자조금 제도를 활성화시켜 **국산 과일의 우수성 홍보 강화**, 정책적으로도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 대책** 강구

자료: 농민신문(2012.6.1).

□ 농지 취득절차 느슨...불법소유 늘어

- 농지를 놀리거나 타인에게 임대했다가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불법 소유자 연간 1만 명** 육박. 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농지 소유자**는 2006년 6,390명(1,590ha) → 2010년 9,527명(1,802ha)으로 **4년 새 49.1%(3,137명) 증가**. 반면 **농경연은** 수도권 A지역 142ha, 평야지 B지역 569ha, 중산간지 C지역 89ha 등 800ha를 대상으로 **농지소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소유 면적은 181ha(22.6%)**, 특히 **수도권은 조사 대상 농지의 33%가 불법 소유,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의 61.3%는 처분의무 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그렇지만 **2006~2010년 정부와 지자체가 적발한 불법 소유 농지는 조사 대상의 0.5%에 불과해 농경연이 파악한 불법 소유 비율 22.6%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 이유는,

■ 처분의무 통지대상자



단속인력 부족과 자경(自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직접 농사짓지 않는 불법 임대차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방지 필요**(농경연 김수석 연구위원)

자료: 농민신문(2012.6.1).

□ 친환경농식품 인증제 통합

- 정부, 5.30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공포. **농산물·가공식품·수산물** 등으로 각기 따로 운영돼 온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가 통합·일원화**...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이중 지정,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 개선, 또한 **첨유 등 비식용 유기**

가공품의 인증이 유기식품 인증제에 포함돼 함께 운영, 아울러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 운영하는 외국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한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동등성이 인정될 예정...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 문제 피하고, 국내 유기가공식품 원료수급을 원활하게 해 유기가공식품의 지속적·안정적인 공급 가능. 개정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향후 1년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2013.5.31일부터 법 시행 예정. 다만 외국의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 관련 규정은 관련 상대국들과의 협상이 필요해 2014.1.1일부터 시행

자료: 농민신문(2012.6.1).

□ 위기의 농업·식문와 외복 위한 일본 도시농업 육성 사례

- 일본, 위기에 처한 농업·붕괴되어 가는 식문화 회복의 대안으로 도시농업 시작(1965년 이후)
 - 현재 3,500여개의 농업체험농원이 일본 전역에 보급돼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 도시민의 모집과 홍보뿐 아니라 각종 이벤트 지원과 편의시설·이용료 지원
- 도시농업은 농촌지역의 농업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농가의 생업으로서 농업뿐 아니라 도시민이 농업을 체험하면서 이해하는 개념까지 내포
- 도시농업의 역할
 - 도시민의 농업 이해, 식량자급률 향상, 농업의 다원적 기능 수행, 도시녹지 확보를 위한 대안, 열섬현상(도심의 온도가 대기오염이나 인공열 등의 영향으로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완화로 지구온난화 방지 등
 - 농작업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원예치료 등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기여
- 우리나라도 옥상·베란다·주말농장 등에서 채소를 직접 가꾸 먹는 도시민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올 5월 들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시농업의 활성화 기대

자료: 농민신문(2012.5.30)_「지금이야말로 도시농」 저자 사쿠라이 이사무

연구 지원 정보

농민단체가 바라는 대선공약(요약)

※ 본 자료는 5월 30일 「국민농업포럼 대선공약 토론회」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전국농민외총연맹]

□ 국가책임 농정 3대 특별과제

1. 농자재는 반값으로! 농협은 농민의 품으로

- 비료값 담합 및 각종 농협비리 편법 관련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실시
- 농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 사료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법 제정
- 농협법 전면 재개정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실시

2. 농업의 사망선고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 중단

- 한·미FTA 폐기, 한·중FTA 추진 중단, 체결된 모든 FTA에 대한 영향 평가

3. 역대정권의 실패한 농업정책의 산물, 농가부채 해결

-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 영세소농의 2천만 원 미만 소액부채는 전액 탕감
- 정책실패에 따른 2천만 원 이상의 부채 '이자면제, 10년 유예, 15년 분할상환'

□ 국가책임 농정 3대 정책과제

1.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식량주권실현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농민에게는 소득보장, 국민에게는 가격안정
-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급식을 확대
- 세계적인 식량위기. 2009년 식량자급률 26.7%, 쌀을 제외 3.7%, 식량자급률 50% 달성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2. 마음 편한 농사, 걱정 없는 먹거리 보장

- 농사지를 땅 걱정 없이 농사짓자, 농지공개념 강화, 불법농지 국가매입, 농민경작권 보장
- 직불제 확대와 목표소득기준을 정해 농민들에게 안정적 소득보장
- 중소농 협업공동체 육성, 생태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3. 농촌지역부터 보편적 복지 구현

- 열악한 농촌지역의 교육·보육·의료·노후 문제해결
- 농촌지역통합복지센터로 사각지대 없는 농촌지역 복지 실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1. 경제 민주화와 연계된 FTA 추진

- 농수축산 분야를 전면 제외한 제한된(낮은 수준의) 한·중FTA 추진
- 무역이득환수기금 도입

2. 대통령 직속 (가칭)농업발전위원회 구성

- 대통령 직속 (가칭)농업발전위원회를 구축하여 5년 단위 농정을 협의·점검

3.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 보장

- 쌀 목표가격 및 보전을 인상
- 밭작물 목표가격제 도입
- 고령 농어가들에 대해 고령농 직불금 지급

4. 농수축산물 생산비 반값 인하 정책 도입

-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
- 농자재 가격 심의위원회 구성
- 고환율 보상제 도입

5. 농산물 유통 체계 개편

- 농협 신경제리 점검위원회 구성
-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농림수산물식품부로 환수한 후 (가칭)도매시장 관리공사를 설립

6. 농어업 관련 기관 특별 채용 및 농어업인력 육성

- 농어업관련 공공기관 신입직원 채용 시 농어업인 자녀 중 50% 특별 채용
- 후계 농어업 인력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 환원

7. 농어업 금융 경색 완화를 위한 농어업금융체계 개편

- 농어업정책자금 금리 1% 인하
- 농신보 심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가칭, 농어업정책금융공사' 설립

8.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농림수산물 예산 확보

- 전체 국가 예산 증가율 수준만큼 농림수산물 예산 증가율 확보

9. 농업인 사회복지제도의 강화

- 농촌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인 사회복지제도 강화
- 농업인 농작업재해보험 제도 도입
- 농부증에 대한 독립 직업성 질환으로 공인 및 농어민전문병원 설치

10.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지역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농어촌공동체 회사 등 사회경제적 영역 강화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